

대 . 여 . 권 . 제 도 시 행 눈앞에 둔 일본

글_백원근



>>> 책과 함께 음악, 영화 등의 콘텐츠를 판매·대여하는 미디어 복합점의 안팎.

내년 대여권 도입 법제 개정

한국과 일본의 현행 저작권법은 대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일단 판매된 도서에 대한 저작권 법상의 규정이 없는 것이다. 범람하는 대여행위로 인해 저작권자, 출판사, 서점이 도서의 판매 기회를 손실당해도, 상업적 대여에 대한 대항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여권貸與權이란, 대여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자 등의 권리 침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도서관 문화가 발전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에서는 심지어 공공도서관에서의 대출도서에 '공공대여권' 까지 인정하는 것에 비하면 천양지차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문화청은 현재 음악 CD나 영화 비디오·DVD 등에 인정하고 있는 저작자의 대여권을 소설이나 만화 같은 출판물에도 적용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9월 30일 전격 밝혔다. 내년 3월 국회 상정을 거쳐 6월부터는 법개정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보다 앞선 9월 25일에는 작년 가을부터 대여권 문제를 검토해온 서적협회, 잡지협회의 '대여 비즈니스 검토 전문위원회'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신간 판매 보호를 위해 대여 금지기간을 설정하며, 대여료 징수는 할증금surchage 방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할증금 방식은 대여점으로 출고되는 시점에서 대여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것이다. 집중관리기구(가칭 대여권관리센터)를 설립하고, 대형 도매상을 경유해 출판물을 대여점에 공급하며, 대여권 상품임을 표시하는 인증상표를 부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자리에서는 출판계가 지난 5월 23일부터 11월 말까지 도쿄 인근 치바(千葉)현의 스바루서점에서 실시하는 '만화 대여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 추진 상황도 보고되었다. 대여료, 회전률, 대여 금지기간 등을 점검하는 실증사업이다.

권리 회복에 나선 저작자와 출판계,
공공대여권도 요구

당초 일본의 대여권은 음악 레코드 대여업체가 전국적으로 2천곳을 넘어 성업하자, 저작권자에게도 그 이익을 환원시키자는 취지로 1984년에 도입되었다. 일본영화 비디오의 경우 대여점은 영화사 및 각본가 등에게 지불할 저작권료(대여권료)를 더해, 비디오를 메이커로부터 시판가의 3.4배 가격으로 구매한다. 음악 CD 역시 작사·작곡가 및 연주가, 제작사 등에 대여권료를 지불한다. 문화청 집계에 따르면, 대여점을 통해 지불되는 저작권료는 연간 약 1,000억 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영세 대여점의 보호 및 독서 진흥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간 도서 및 잡지에 대한 대여권 적용은 저작권법 부칙에 의해 유보되어 오던 터였다. 그러나 경기 침체 와중에 대형 대여점 체인의 등장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관련 업계 현안으로 부상하였고, 주무부서인 문화청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05년부터 저작자에 대한 대여권료 지급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만화 왕국인 일본답게 '21세기 만화작가의 저작권을 생각하는 모임'이 수년 전에 대여권 쟁취를 가장 먼저 선언했고, 이어서 작가 및 출판사 관련 15개 단체가 '대여권 연합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협의회가 대여권 부재로 인해 가장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는 나라가 다른 아닌 한국이다. 한국에서는 8천여 곳의 도서대여점이 난립하면서 만화 판매부수가 전성기의 10분의 1로 줄었고 생업을 포기하는 만화가가 많다고 분석한다. 협의회는 기존 영세 대여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대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형 대여업체들은 "법률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저작권료가 높아지면 대여료도 올라가므로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 밝힌다.

한편, 상업적 대여 행위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논의와는 별개로 공공도서관에도 대여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작가와 출판계의 요구가 거세다. 공공대여권 도입 논란이다. 공공대여권(PLR : Public Lending Rights)이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열람·활용할 수 있는 곳에 저작물이 소장될 때,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준다는 개념이다.

최근 수년간 출판시장이 침체에 접어든 반면 공공도서관의 대출량은 급속히 늘어나 작가 단체와 출판 단체를 중심으로 도서관에서의 공공대여권 입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수의 베스트셀러를 공공도서관이 대량으로 비치하여 대출 서비스를 함에 따라, 도서관 이용률은 높아진 대신 서점에서의 판매량은 감소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도서관 예산의 삭감이 현실화되면서 전문도서의 도서관 장서 확보 여력은 보다 떨어져, 저작자와 지식인들은 "공공도서관은 무료대여점인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공공대여권이 도입된다면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져, 그렇잖아도 예산 삭감으로 골머리를 앓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도서관의 대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일본도서관협회와 일본서적출판협회가 합동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공립도서관 대출실태 조사보고서>는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전체적으로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대출률이 높게 나타났고, 출판사의 발행부수 중 도서관 구입률은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으며, 독자의 도서 접촉 계기 중 도서관의 비중을 나타내는 '도서관 제공률'은 발행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형태의 보다 엄밀한 조사와 논의가 거듭되면서 공공대여권의 제도적 실현을 위한 논의도 점차 깊어질 전망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여권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저작권법 개정 현안으로 제기되는 분위기이다. 일본의 추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형 대여권 비즈니스 모델 정립에 나서야 할 때이다. **한경닷컴**

>>> 일본의 도심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전형적인 24시간 영업 만화 찻집. (2층)



이 글을 쓴 백원근은 현재 (재)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일본출판학회 정회원으로 일본 매스컴업계 주간지 <文化通信>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02년 일본 문화청에서 주최한 <동아시아 출판문화 심포지엄>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으며 펴낸 책으로는 번역서 《출판광고》 등이 있다.